5·18 기성 언론 입 다물 때 대학신문, 진실 알렸다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실장, 전국 24개 대학 신문 분석

"민족의 비극 잊을 수 없다" "남으로만 흐르는 5월…" 서울대·전남대·조선대 신문 등 '광주의 아픔' 다뤄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탄압으로 신문·방송 등 기성언론이 입 다물 때 대학생들이 주도한 대학언론에서는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보도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전남대 5·18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 22호에는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실장이 발표한 '대학신문에 나타난 5·18의 보도 형태 연구: 학원자율화 조치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박 실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직후 5개 신문사(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와 전국 24개 대학에서 발행한 신문을 비교·분석했다.

논문에서 박 실장은 "1980년 5월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광주시민들을 대변하기보단,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왜곡으로 일관한 신군부의 발표를 마치 '진실'인 듯 앵무새처럼 반복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신문 역시 신군부와 대학의 개입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보였지만 기성 언론이 오랫동안 5·18에 대한 침묵과 왜곡으로 일관했던 것에 반해, 1981년 5·18 '1주기'를 전후로 직·간접적으로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는 게 박 실장의 연구 결과이다.

서울대 신문인 '대학신문'은 1981년 5월 11일자 칼럼에 "18일의 그날, 광주사태라고 불리어지는 민족의 비극을 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실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 다른 대학 언론들은 간접적으로 5·18을 떠올릴 수 있는 기사들을 보도했다.

南으로만 흐르는 5月의하늘

◇5月의 메모◇
▲5일—어린이날
▲6일—성년이날
▲11일—석가탄신일

1981년 5월 '전대신문'은 5월 일정 한 줄을 빈칸으로 남겨〈빨간선 안〉 5월 18일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공백을 활용했다.

'성대신문'(성균관대)은 1981년 5월 25일자 1면에 '5·12교내시위로 6명이 구속되고, 9명의 학생이 제적 처리됐다'고 보도했고 '이대학보'는 6월 1일과 8일자 1면에서 시위 소식과 구속·연행 기사를 실었다. 시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5·18 관련 시위임을 연상하게 했다.

조선대 신문사 기자들은 선·후배들간에 모금을 통해 별도의 신문 이른바 '지하신문'을 제작하기도 했다. 1983년 6월에 발행된 1면에 '조대학보, 따로 덧붙여 내면서'라는 글이 실리고 2면에는 기자 일동의 '우리들의 입장'이 게재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객관화되지 못한 보도, 보도 기사의 미비, 비평기능의 저하, 구문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늑장 보도 등으로 올바른 학내 여론 반영과 조성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우리 기자는 다시 한 번 통감한다"고 밝혔다.

1981년 5월 '전대신문'은 '남으로만 흐르는 5월의 하늘'이라는 제목 아래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배경에 두고, 시민대회가 개최됐던 도청 분수대에 포커스를 둔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사진 옆 '5월의 메모'를 통해 5월의 일정을 알리면서 5일 어린이날, 6일 성년의 날, 11일 석가탄신일 다음 일정 한 줄을 빈칸으로 남겨 5월 18일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공백을 활용하는 재치를 보였다.

박 실장은 "학원자율화 조치 전까지 5·18을 기억·기념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의 각종 시도들은 계속됐다"면서 "통제와 탄압속에서 5·18에 대한 진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했던 대학신문들 덕에 민주화 물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난개발저지시민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무등산을 개발과 돈벌이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용섭,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발언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무등산이 돈벌이 대상인가"

광주 환경단체, 시장 후보들 '정상 운송 수단 설치' 비판

광주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23개 시민단체들이 5일 "무등산에는 산악열차도, 케이블카도 도로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수용의 뜻을 비친 무등산 정상 운송 수단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무등산에 수소트램, 전기차, 케이블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전환특위의 중간보고에 대해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가 이를 수용,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오히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표만 의식해 무등산 훼손을 선택한다면 우리 지역은 첨예한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시장 후보가 검토하고 추진할 일은 무등산 정상에 자리한 군부대의 이전과 방송 통신탑의 통합, 이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 산하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방식 무등산 정상 접근로 개선 논의 TF(약칭 무등산 TF)'가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향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 등이 무등산 산악열차·케이블카 설치 반대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허민 TF 단장은 "무등산 접근성 제고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논의돼 온 내용"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기존 군용도로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을 즐길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민선 8기 집행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취업·창업 지원제도 약하다"

10명 중 4명 '약점' 지목…학교 최대 위기로 '탈 광주·열악한 취업환경' 꼽아

전대신문, 재학생 설문 조사

전남대학교 학생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전남대의 약점으로 '취업·창업 지원제도'를 꼽았다.

가장 심각한 전남대의 위기로는 '탈(脫) 광주하는 청년의 증가'와 '지역의 열악한 취업환경'이 지목됐다.

이는 '전대신문'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남대 재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대학의 미래를 그리다'를 제목으로 지난 4일 게재됐다. 전대신문은 전남대 학생기자들이 제작하는 학내 언론이다.

설문 결과 전남대의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45.6%가 '취업·창업 지원제도'가 약점이라고 답했다. 대학이 취·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학생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전남대의 강점으로는(복수 응답 가능) 응답자의 99.5%가 '저렴한 등록금'을 꼽았고 '장학지원제도'(83.0%), '지역에서 인정받는 대학의 위상'(82.0%), '학문전공의 다양성'(71.8%), '강의의 수준과 커리큘럼'(59.7%) 순으로 선택했다.

학생들은 전남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 항목에서 21.6%가 '탈(脫) 광주 하는 청년의 증가'라고 답했고 이어 '지역의 열악한 취업환경'(18.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부족'(16.7%), '대학 서열화'(14.8%), '수도권 중심의 정부 재정 지원'(12.9%), '대다수 학생의 공기업·공무원 선호'(10.4%) 등 순으로 꼽았다.

전남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26.0%는 '지역기업과 협업 관계 구축'을 선택했다.

이어 '취업 및 창업 지원 제도 강화'(17.5%), '대외활동 지원 제도 강화'(17.5%), '학문 전공의 다양성 및 연구지원 등 교육 내실화'(13.1%), '장학 지원 제도 확대'(9.5%), '다른 대학과 교류 제도 확대'(7.8%) 순으로 답했다.

전남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의 77.7%가 '광주의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밝혔고, '민주화운동의 중심지'(18.4%)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30년 후 기대하는 전남대의 모습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질 높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라고 밝혔고 '호남을 대표하는 우수대학'(31.1%), '학생과 긴밀히 소통하는 대학'(16.5%) 순으로 응답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구, 1인 가구 '맞춤형' 자립·활동 지원

광주시 동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했다.

5일 동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과 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동구 1인 가구 맞춤형 종합정책'을 운영한다.

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올해 2월 말 기준 48.3%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고(광주 평균 39.6%), 전국에서 9번째로 높은 비율(2020년 통계청 인구통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종합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이에 동구는 행정 협업회의에서 발굴한 정책사업 중 30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14개 부서 5대 추진 분야(사회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공동체 활성화, 건강지원, 문화 여가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5대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여성 주거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어지킴이 ▲산계(산수동·계림동) 1인 가구 안심마을 조성 ▲1인 가구 노후 불량주택 개선 ▲청년주거공간 '동명하우스' 조성 ▲마을사랑채 등을 활용한 1인 온리 마을플랫폼 활성화 지원 ▲동구가족센터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청년 1인 가구 공유 부엌 및 방문 방역 지원 ▲1인 북큐레이션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 전 부서 협업체계를 통한 1인 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